

제367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5 호

국회 사무처

2019년3월19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1. 정치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대표발언 ..... 1  
1. 정치에 관한 질문 ..... 4

(14시07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대표발언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입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더욱 힘들어 졌습니니다. 청년은 취업을 못 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니다.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으로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급박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던 촛불의 정신과 주체는 사라지고 무능과 억지가 판치는 정치 현실입니다. 3년 전 수천만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남녀와 노소, 직업과 빈부에 상관없이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이게 뭐지?’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지셔야 합니다. 인사의 실패는 이 정부의 대표적 독선의 상징입니다. 야당 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 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 공직을 꿰어 찻습니다.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외에는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정권보다 야당과 민간에게 도움을 구하고 협치체제를 구축했어야 합니다. 내 사람이야 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졌어야 합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였습니다. 탈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의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나 의도가 잘못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표나 의도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쪽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합니다. 적대적 공존은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치세력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정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치가 그들만의 권력과 욕심을 추구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국민을 위한 실용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며 최종 목표 역시 국민임을 정치권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는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저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 제1조에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더욱 젊어져야 합니다. 미래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로의 인하가 꼭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도 동참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민들은 불안함을 머리에 이고 살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불가침 선언을 한 이후 평화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이 덮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역류하는 듯 보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비가역적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 간의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결코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약속의 이행 결과이며 평화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국자 간 약속을 소통과 이해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참여를 통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측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작은 조치라도 결코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평화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역시 실현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낼 인류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위험한 줄다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가역적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기라고 인정하고 대책을 세울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오래된 패종시계같이 보이는 이 정책은 국민들에게는 이미 풀밭 위의 고장 난 시계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해 왔습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고용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좇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다는 소회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어

면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에 이 정부는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7년도 GDP 성장 3.1%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무려 0.8%나 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시장의 활력이 무너지고 산업경쟁력이 아닌 정부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 체질로 위축되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엑소더스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업이 떠나가겠습니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완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산업정책에 두어야 합니다. 공허한 혁신성장 구호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 전쟁입니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도 기술발전의 이해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예술이 된 이 시대에 기술의 영역은 인류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성장의 유일한 잠재력입니다. 정부는 기술 중심의 성장정책을 천명하고 그 주체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을 내세워 중점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정책의 비전을 정부에서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획기적인 재정투입도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

문가 풀을 모아 범국가적인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의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촛불의 주인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불신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운영체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14인은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상임위의 무력화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상임위의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밀실 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조를 공식 요청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회 스스로 자존심과 위상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회 전체가 무력화됩니다. 우리 국회 회의의 중심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서 상임위원회가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맹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외세의 억압과 독재에 항거한 민족·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의 상징이며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운동입니다. 5·18에 대한 평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면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반헌법적·반역사적 행위가 우리 사회에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차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내에 5·18 망언 의원의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이라면 성공은 요원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십시오. 당동별이(黨同伐異)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용사회는 포용정치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역시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재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 퇴행적 극우세력의 결집이 일순간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을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열린 자세로 5·18과 박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행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대한민국 국익 앞에 하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중의 패권 전쟁,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대외 환경에서 우방과의 결속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퇴보하는데 우리 국회는 미래 준비에 손을 놓고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대한민국의 경제회생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여와 야가 하나되어 주춧돌을 놓읍시다.

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장병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정치에 관한 질문

(14시30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갑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문이 되어서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을 모셔서 위원장으로 합시다’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정부에서 잘돼 가고 있습니다. 협치의 표본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협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이 핵무기에 얼룩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니다. 그 추웠던 겨울에 평창 올림픽의 그 눈발에다가 우리는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무를 잘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 그 평화의 나무가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미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됩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공고하게 되어야 됩니다. 친일 잔재는 청산되어야 됩니다. 1700만 촛불의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이룩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5·18의 가치를 폄훼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의원 여러분!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검찰의 적폐는 누가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검찰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또 정치검찰, 떡값 검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검찰의 폐해에 대해서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을 가서 떡볶이집을 갔을 때 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서민쇼를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진짜 서민정책을 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아프게 했더니 일부 한국당에서 왜곡,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일이 커졌습니다. 제가 미움을 많이 사서 사찰을 두 차례나 받고 또 국정원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두 건이나 검찰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저를 대신 있을 때까지 1년 반 동안을 오라 가라, 소환장을 한 열 번을 내면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당 대선후보 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선거가 딱 끝나니까 검찰에서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날아왔나 하면 ‘면책특권이니까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면책특권이면 처음부터 면책특권이 왜 대통령선거 못 하게 발목 묶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니까 그때서야 검찰은 헌법의 면책특권이라는 네 글자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치검찰의 폐단은 얼마든지 있습

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한테 따졌습니다. 민간사찰, 장진수 주무관에게 주었다고 하는 5000만 원 관봉 돈의 출처가 바로 당신이 민정수석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비자금이었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냐고 따졌더니 펄쩍 뛰더니, 한 길은 뛰었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저희 숙소에서 검사와 10여 명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해서 휴지통 종잇조각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그다음 날부터 방송에 나오는데 이석현이 저축은행 돈을 받았다 하고 한 열흘간 막 나오더니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증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증인이 누구냐 하면 저축은행 자기 회사돈을 횡령한 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갑을 채운 증인을 갖다 세워 놓더니 검사가 말하는 것마다 증인이 다 ‘예, 검사님 말씀대로입니다, 검사님 말씀대로입니다’ 이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변호사가 증인에게 반대신문했어요. 그러면 이석현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줬으면 5만 원짜리로 주었소, 1만 원짜리로 주었소’ 이렇게 물었더니 ‘5만 원짜리를 절반, 1만 원짜리를 절반 섞어서 줬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돈 줬다는 시점이 한국은행이 5만 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하기 훨씬 이전이었어요.

거짓말이 들통이 나 가지고 깨졌어요. 모든 증거, 증인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깨져 가지고 판사가 나중에는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이것 조작사건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지 그때부터 달라지더니 1심 무죄, 2심 무죄, 3심은 검찰이 법원에 상고조차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망신당할 게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된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바로 제가 야당시절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겪었던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하에서 촛불혁명 이후의 우리 정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려면 검찰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국민과 의원 여러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적폐청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 만들면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려면 과거 정권이 저한테 했듯이 검찰을 시켜서

하면 쉽게 되지 뭐 때문에 국회에서 뽑는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야당 탄압을 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가 찬성이 몇 %쯤 나온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8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한 83%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대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국민 83%가 공수처 만들라고 하는데 국회가 왜 안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야당 탄압할까 봐 그러는데 우리 민주당 공수처 법안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에 속한 추천위원회가 후보 두 분을 추천하시면 의장께서 원내 교섭단체들과 협의하여 그중에 한 분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구성도 4명이나 국회가 뽑고 거기서 공수처장을 추대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장이 한 분을……

○이석현 의원 국회의장이 혼자 지명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다음에……

○이석현 의원 여야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

○이석현 의원 자세히 안 읽어 보셨구먼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청하면 대통령은 임명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을 탄압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 하려고 들면 검찰이 탄압하기가 쉽지.

미세먼지, 이번에 중국 가지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석현 의원 중국 가지면 미세먼지 공동대응 선언 같은 것 제안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전 물밑 협의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현 의원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논의하겠다 이 말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북·미 회담이 깨져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북특사를 보낼 계획은 없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마는 현재는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특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 사전 협의도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속이 속이 아닐 텐데 여기 와서 손 흔들고 다닐 마음이 나겠어요? 지난번처럼 관문점에서 남북 정상 만나서 이벤트 없이 진지하게 대화를 의논하면 좋겠는데 그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빠르고요. 그 이전에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준비도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남북 간에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국면이다 이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석현 의원 그렇지요. 남북 간의 대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단속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법의 미비가 있습니다. 현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기타 정보 관련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경찰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관련해서 주가라든가 금융질서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KT 특혜채용이 자꾸 언론에 나는데 요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검찰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성역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함

니다.

○**이석현 의원** 성역 없이 다 수사해 주세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의원** 김학의 사건 동영상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 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100% 김 차관이라고 하던데 그런 보고 받았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형식의 보고는 받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판단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현 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차관인 것은 맞는데 강간 혐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당시에 동영상 속 남성의 식별이 누구인지 어렵다라기보다는 피해 여성들 중의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석현 의원**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역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동영상에 틀림없이 김 차관이면 바로 거기에 강간 혐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탄말하면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최근에 경찰청장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감정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석현 의원** 장자연 사건 접대자리에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자꾸 신문에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왜 그런 자리에 갔을까요? 혹시 언론 출신 국회의원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회의원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석현 의원** 진술에 나왔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석현 의원** 윤지오 증인 무슨 일 안 당하도

록 신변보호 잘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상기** 현재 신변보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 행안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버닝썬 사건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검은 사람 들하고 많이 유착이 있나 봐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일부 경찰관 중에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석현 의원** 버닝썬만 그랬을까요? 전국에 큰 클럽이 많이 있는데 다 이렇게 경찰이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이 문제가 갖는 국민적인 분노를 경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말을 몇 번 하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그리고 단순히 버닝썬 클럽뿐 아니라 전국의 이런 대형업소들을 중심으로 마약이라든가 성매매 등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석현 의원** 가수 정준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속히 안 하고 한 삼사일 시간 줬다가 했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왜 어떤 형식으로든지 체포를 하거나 연행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고요. 출두할 날짜를 잡아서 바로 관계되는 것을 일부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 대의 휴대폰을.

○**이석현 의원** 그래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나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그런 내용은, 수사의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고 또 국민적인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있으면 어디 누구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석현 의원** 윤 총경이 유인석 씨하고 골프 칠 때 같이 친 연예인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윤 총경을 유인석한테 소개한 건 누구였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제가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네트워크로 엮였고 또 어떤 행위가 있었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석현 의원** 최종훈 씨한테 생일 축하 전문을 누가 보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직접 본회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답변할 처지입니다마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또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혹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석현 의원** 용산서 팀장이 보냈다고 하던데 진술할 때는 그 말 안 했다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결국은 수사 당국, 특히 경찰이 국민적인 분노를 살 만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저도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인과관계 이런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현 의원**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미국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터야 하지 않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또 저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 의견 더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도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자면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이석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이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당시에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 전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이 있었고 밖으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느라 노력해 온 기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북핵 위기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평화 분위기로 바뀌었고 국정의 혼란과 공백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거나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욕심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총리의 평가와는 달리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리얼미터에서 어제 나온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가 44.9%입니다. 취임 초에는 84%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취임 초기의 기대에 차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저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는 안보 방치와 안보 불안,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시도, 내로남불의 적폐청산과 국민 편 가르기, 자격 없는 공직후보자들 대거 임명과 내 편 박기 식 낙하산 인사 강행, 드루킹 게이트를 비롯한 김경수, 안희

정, 이재명, 손혜원 사건 등에서의 이 정권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 정부의 도덕성과 위선을 이제 국민들이 차차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영변 외에도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때가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언론에도 수년 전부터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 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 총리는 북한이 다른 시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수년 전부터 보도되고 있어서 저도 알고 있었고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공유된 정보를 어느 일방이, 특히 우리가 공개할 때는 미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주호영 의원 그렇다면 영변 시설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라고 발언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이 정부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국민들에게 감춘 채 영변의 일부 폐기만으로 북한 핵을 용인한 채 완전 비핵화를 주장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아니, 그렇다면 영변만 폐기하면 부분 제재 해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핵은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발표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제재와 비핵화의 진도가 일정한 비례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데 한미 정상이 동의를 했던 것이지요.

단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호영 의원 요약하면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알리지는 못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남북 교류하고 해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 언론에 수년 전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일부러 숨기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일 뿐입니다.

○주호영 의원 이 정권은 남북 비행금지구역 설정, GP 철거,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다수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거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심의를 당연히 거치겠지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 사항은 심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률적으로 심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호영 의원 헌법 89조 6호에 의하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실조차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닌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포괄적으로 군사 합의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제가 파악하기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혹은 국무위원의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증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국무회의 심의 여부를 따져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는 진짜 총리께서 제청하신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러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형식적으로 제청서에 도장만 찍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제청에 관여한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에 관해서 토의를 합니다.

○**주호영 의원** 그렇다면 ‘감염된 좀비’ ‘썩다 버린 낱’ 등 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후보자인데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더구나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김 후보자의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미국과 갈라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는데 제청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의 대외정책은 통일부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약속은 지금 와서 두 번 듣기조차 민망합니다. 말끝마다 촛불정신과 도덕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하는 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이지아 내로남불이고 신적폐의 양산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각의 장관후보자 중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뿐만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건축 딱지 투기와 위장 증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도 제청을 철회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후보자를 내놨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심지어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례없이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을 임명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의 특보였던 사람을 내보내서 헌법기관들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

습니다. 이렇고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입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분은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하고 충분히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 점을 높이 샀다고 판단합니다.

○**주호영 의원** 중립성이 생명인데 전문성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과정도 충분히 검증해 보시면 중립성을 훼손할 정도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그러니까 국민들은 참 답답한 겁니다, 총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조와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수해대책을 세웠고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에 무려 87조 4000억 규모의 대규모 치수사업을 계획해서 국무회의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22조로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진짜 보 철거할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나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 주리라 기대합니다.

○**주호영 의원**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철거할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세종보의 철거에 대해서는 가장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고 법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보 철거 시도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최저임금은 2년간 무려 29%나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아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지난 4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무려 17.7%나 감소해서 6년 전의 소득 수준으로 돌아갔고, 상위 20%는 오히려 10.4%나 증가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 내년에 또 올리고 강행하시

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해서 상위 20%가 혜택을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위 20%의 절반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계층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명암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잠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또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귀 막고 방울 훑친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처음 들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내 귀만 막으면 남이 다 안 들을 것 같지만 딴 사람은 다 듣고 있는데 혼자만 귀 막고 방울소리가 없다는 것과 진배없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0년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관련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서 정리가 됐고, 이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 검증해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울경 단체장들이 다시 폐기된 가덕도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말씀도 어느 정도 휘발유를 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해 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부울경에서 민간 중심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한 의의가 제기돼서 그분들 나름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검증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되지 않고 끝내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정이 안 돼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처럼 동남권 신공항 그 문제도 조정이 안된다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오랜 논란과 절차를 거쳐서 정리된 갈등을 다시 잘못 꺼내면 큰 국론 분열과 지역 대결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확정된 정책을 추진해야지 함부로 하다가는 정권 자체가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훈록을 작성하고 그 명단이 공개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는 그 공적을 널리 알려서 현창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18 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그 업적에 관해서 공훈록을 작성하고 국민들에게 그 공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공기관 기록에 관한 무슨 법이든가요, 거기에 공개에 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 해석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대해서 답하지 마시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공개하고 현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비밀에 두고 국민이 모르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록물 보호 무슨 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공개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조문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냐고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로서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어제 대통령께서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 수사 지시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안행부·법무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해서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꼭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이 수사 해태한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관해서 재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드루킹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에 63만 명 이상의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매우 약해지고 25% 선 밑으로 떨어지면 레임덕 수준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고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촛불정권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법치주의와 공정이라는 촛불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라고 생각하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나라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절박한 민심을 새겨두고 협치로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협치와 통합 없는 정권은 처참한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뒤늦은 통탄은 민주당 정권만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의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주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리해 주신 관계부처 장관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 정권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최악입니다. 정치·사회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활개치고 공권력은 사회 어두운 곳과 결탁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암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경세유표’에서 ‘터럭만큼도 병통이 들지 않은 곳이 없는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못 되어 조선은 망했습니다.

6년 전 이맘때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다시 ‘한국 경제는 여전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다. 5년 전보다 물 온도는 더 올라갔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정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보통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실은 무능하고 민정수석실은 통째로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엘리트 간부가 마약, 성매매,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유흥업소의 뒷배를 봐주었습니다. 그 경찰은 다름 아닌 이 정권의 권력 핵심부인 민정수석실에서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경찰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부패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 등 수사나 사정기관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정권과 연고나 인연이 없으면 가지 어렵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떻게 근무하

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나름의 소정의 절차를 밟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이태규 의원**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면 저는 총리께서 당연히 알아보셨거나 아니면 밑에서 보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추천한 추천 과정이나 추천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서 국회에 보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알아서 그러면 누가 추천했는지 국회에 보고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추천자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는데 누가 추천했냐 하는 게 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원님, 그가 어디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것처럼 일부러 덮거나 비호하거나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태규 의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김태우 수사관 사건의 발단도 사실은 청와대 반부패실 조사관들이 평일에 집단으로 골프를 치고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서 빚어진 사건이었습니다. 6급 수사관이 장관실을 들락날락하고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은 육군 총장을 카페로 불러서 면담합니다. 군사 기밀인 인사자료를 분실해도 사표 쓰면 그만입니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기강해이가 전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 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원의 시민 폭행, 역대 이런 청와대가 없었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직무감찰과 쇄신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가 누구이건 어떤 경로로 들어왔건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윤 총경 비

위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무능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그 사안의 진실을 안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청와대도 전체 정부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대통령비서실이고 해서 총리께서 치외법권 지대로 두셔서는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도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청와대의 국정 독점으로 내각이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관료들 사이에는 외교안보는 안보실이, 경제사회는 정책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과 인식이 퍼져 있다는 말은 못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각 부처가 장관 중심으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대통령 국정 운영의 중심 추가 내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헌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이태규 의원**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방침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내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이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계획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의 중심은 내각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책의 기획은 상당 부분 할 수 밖에 없고 각 정부 나름의 국가 목표의 설정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전략과 기획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규 의원** 내년도 국정 키워드를 정책실장이 나와서 선언합니다. 정부 종합정책의 기조를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없이, 그리고 이 정책

실장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들 불러서 훈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성과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집권 초의 부동산 폭등과 연말이 되면 최저임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허언을 남기고 중국대사로 떠난 전 정책실장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총리께서 나서서 ‘국정 운영은 당정청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지만 보좌기관인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설치하면 내각이 안 돌게 되어 있다. 총리 역할도 제한되고 책임 장관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동을 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정책실장이 그 정도로 전면에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고요. 거의 매주 만나지만 그런 기미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규 의원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는 곧 정치와 국정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역대 모든 정권이 주는 실패의 교훈입니다.

총리께서는 만기청람 이런 국정 운영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야당의 경고를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제청권을 행사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편향된 대북관과 막말식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태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셨다면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기준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이분이 학자로서의 연구실적 그리고 과거에 남북 협상에 임했던 현장의 경험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높이 샀습니다. 다만 자유인으로 사신 기간이 길어서 언동때로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지리라 바라구요.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그분의 태도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 청문회에서 거르기 이전에 제청 과정에서 거르실 수는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

도 이분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규 의원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택한 후보가 이 정도라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대단히,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리더십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태규 의원 나라가 어려울수록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는 국민 통합과는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적 학자로 평가받는 최장집 교수는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대해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지극히 갈등적인 문화투쟁, 현 정부가 이념적 지형을 이용해서 촛불시위 이전 못지않게 더 심한 이념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는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원로학자의 말씀을 제가 논평할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체 잔재의 청산은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의원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역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북핵 문제도 안 풀리고 민생경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역사논쟁, 이념논쟁 일으켜서 이슈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얘기 가지고 북핵 문제나 경제 문제가 어떻게 반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태규 의원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총체적인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 성공하고 있진 못하지만 나름의 많은 정책을 펴고 있고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상생 발전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민 통합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에 수렴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내각의 지위와 역할, 위상은 지금 충분히 보장받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내각을 모시고 일하는데 청와대 때문에 무슨 장애를 받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태규 의원** 대통령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항상 논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모든 문제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분야는 뭐든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야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식 또 청와대의 독주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부족하지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는 많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 감찰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면 그 결과는 무능과 독선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야당 무시, 동맹 무시, 시장 무시의 사고로는 난제들을 결코 풀어 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논쟁과 이념논쟁을 촉발시키려는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는 증오와 배제의 기운이 넘쳐흐릅니다.

역사는 한 정파에 의해 결코 독점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에 의한 독점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치장되지만 목적은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영과 지역에 기반한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몇 차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권력을 쥔 세력들마다 지대추구 세력으로 전략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올 오어 낫쌩(all or nothing)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협과 양보 속에 부분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부분적 승리는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해석이 한 시대, 한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듯이 정치도 국회도 한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타협과 양보,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진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중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상황 인식과 국정 리더십을 바꿔야 합니다. 한 정파의 주장, 정치 팬덤의 대표에서 벗어나 국민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입니다. 위기 극복의 힘은 통합에서 나옵니다. 분열과 편 가르기, 증오와 배제의 정치에서 무슨 생산적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고 분열의 리더십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역사가 마땅히 평가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전해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도화할 주요 개혁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실행 중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등에 대한 입법을 하고 구체적인 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정부에 대한 의회의 비판과 견제도 가능하더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개혁입법 관련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니다.

국정원 조직 개편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해철 의원 그 경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정원법 개정 문제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정보위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해철 의원 선거 관련 댓글을 게재했고요, 국정원이 지난 정부 정권에서,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헌법재판소 또 사법부 사찰했지요?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국정원에서는 자체 개혁을 추진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수백 명의 요원들을 북한·방첩·대테러라든지 부서로 다 보냈습니다. 국내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법 제3조에 보면 여전히 국내정보를 할 수 있는 영역과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률과, 국정원의 현행법과 현재 국정원이 하고 있는 조직 운영이 안 맞다, 이런 현실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운영과 법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내 보안정보 속에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개입의 오해 소지가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내정보 수집 이것은 손을 뺐는데 현행법으로는 그것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뒀다가는 다시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소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철 의원 그렇습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입법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국정원의 퇴행된 또 파행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대공수사권 폐지인데요. 총리

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공안사건을 국정원이 당시 기획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것 역시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 중인데 여기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동안의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의 월권, 권한남용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지금의 국정원은 대공정보의 수집과 분석까지는 하되 수사는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수사도 그냥 통째로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사개시 단계부터 넘겨 드리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 노력이 제도적으로 완결돼서 다음에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다시는 이런 파행적인 모습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정원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의원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두 번 수사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나 아니냐 또는 피해자가 맞냐 안 맞냐 등의 이야기로 해서 두 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얼마 전에 나온 피해 여성 증언이라든지 또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그런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증 부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오전에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한번 답변하실 필요가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시다시피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그 동안에, 이달까지 하면 13개월 동안 진상 조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달 간의 기한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사단에서는 밝혀야 될 의혹 사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 이것들을 잘 가려서 보고서를 내면 그에 기반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오전에 기자회견 할 때는 진상 규명 작업은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권이 한계지요, 수사권이 없고.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전해철 의원** 따라서 이것을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2개월 연장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좀 더 신속하게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2개월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잘 준비해서 재수사를 해야 되고요.

재수사할 때 수사 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가 있겠지요? 뇌물이나 또 합동 강간이나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더해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을 거고, 나아가서 검증 및 추천 과정에서의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그 당시에 1차·2차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어떤 은폐·축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거기에 더해 당시 청와대 검증은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된 거거든요. 차관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또는 고의로 은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주일 만에 낙마를 했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당시 추천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측에서 경찰 수사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왜 보고하지 않고 수사했냐라는 질책을 했고 나아가서는 이 질책 이후에 당시 경찰의 지휘부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담당자들이 모두 전보되거나 좌천됐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사단이든 수사든 간에 밝혀질 부분은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제 질의는 장관이 제가 질의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전해철 의원** 예.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전해철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점 의혹이 없이 오늘 기자회견하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사주는 물론 전직 국회의원까지 관여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결국은 60만 분 이상이 진실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또한 권력층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 역시 조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 그리고 사실 규명,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해도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된다는 부분은 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라는 주요한 근

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공수처 설치하는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만은 꼭 공수처 입법이 저는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장관께서도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배전의,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시지요.

국민 여러분!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게 됐지만 이마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사회갈등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29위 중 3위의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가 사회 갈등을 끌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비타협의 선명성을 내세우며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추진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전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한미 동맹국이지 조정자가 아니라고 비난한다’, 지난 15일 자 워싱턴포스트지 기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모든 보도 기관은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만 매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으신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

렇게 전화를 해서 역할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가지고 워싱턴포스트가 쓴 것인데 똑같은 그 자리에서 최선희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역시 인정하고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라고 말했는데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아주 긍정적인 면만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팎의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문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내용이다, 아프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심정입니다.

○**김재경 의원** 결국 김정은의 말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할 것이다, 논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전후의 여러 가지 전개, 최고지도자의 발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 책임자는 평론가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그런데 김정은을 과연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어떻게 믿느냐? 형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3분의 2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한 말인데 절대권력자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총리님. 잠 오지 않는 밤에 김정은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잘살 수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지도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자기가 죽을 짓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의 말만 가지고 비핵화를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국가정보국의 덴코츠라는 국장도 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의원님의 충정을 믿습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불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접근법 가지고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이 비핵화 문제에 한 발짝도 진전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의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역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평창 그다음에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심지어 백두산 이벤트,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 평화 이벤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됐지요.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평화의 문제, 민족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경 의원**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가 이제는 긍정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와 별도로 평화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과거의 그런 접근 방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줬습니까? 그것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평소 총리님답지 않게 제 시간까지 가르치면서……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재경 의원**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도 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제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최설희 부상의 최근 발언, 하노이 회담 직후에 북·미 두 정상이 했던 발언들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 북한이 놓여져 있는 상황, 최근 수년 동안의 전개 이런 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재경 의원** 지지도가 떨어지고 초초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수 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것은 의원님의 안목의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벤트는 효과가 없다,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냉엄한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때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향한 길을 신념을 가지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북한에 대한 대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재경 의원** 이게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미 동맹의 공고함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정부도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합훈련의 유보 같은 것도 그에 대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것이 한미 동맹 약화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저들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키리졸브 연습은 연습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절반으로. 그리고 반격작전은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독수리 연습은 군단급에서 대대급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고 을지프리덤가디언은 한미연합 같이 하다가 단독으로 하는,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보면 공중 행위 중지 그래 가지고 정찰 기능과 대화력 전개가 상당히 무력하게 되었고 GP는 3배 정도 북한이 많은데 똑같은 숫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도 남북 간에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한미사령관마저도 이런 군사훈련의 축소는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외교 노력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이낙연**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요,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김재경 의원** 안보 태세를 과거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면 그것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재경 의원**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하면 국민적 안보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재작년 11월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9월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도발이 없어진 지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김재경 의원** 총리님이 균형 있게 간다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는 게 어떻게 균형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포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김재경 의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가 되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질문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나오십시오.

저희들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과연 무엇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

는 반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진 현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좀 더 냉정하게 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한국 외교의 현실을 봐야지」 하는 의원 있음)

○**김재경 의원** 거기에는 물 없습니까? 물 한잔 드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사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조사입니까?

○**김재경 의원**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김재경 의원** 작년 4월 19일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날 오전에 경남 진주에서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 출마를 하겠다’ 기자회견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뒤에 밝혀진 바로는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온갖 언론에서 추측 기사를 냈어요. 김경수 불출마한다는 유력 일간지 보도들이 막 쏟아졌지요. 오후 4시 반에 국회 기자실에 김경수가 나타났습니다. 출마 선언 거기서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일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김경수 지사가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출마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출마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재경 의원** 드루킹 사건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의 등을 떠밀어 출마를 하게 했느냐? 청와대가 강하게 밀었다라는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출마하지 않으려는 김경수 지사를 강제로 출마하게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강요요 권리행사 방해인 실정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뭐 뭐라면 이렇다라고 하셨는데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드루킹의 여론조작에 대통령과 영부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여론조사는 못 봤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이 여론조작의 최대의 수익자는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개 자체를 청와대 비서실에 후에 근무하게 되는 송인배 씨가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운명’은 봤습니다.

○**김재경 의원** 제일 첫 구절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김재경 의원** 전화벨 울립니다. 불길한 전화를 받습니다. 저쪽에서 ‘실장님, 저 경수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알리는 김경수 지사의 전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재경 의원** 저는 아주 강하게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노무현·문재인·김경수의 관계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일 때 수행팀장 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재경 의원** 당선 전후의 모든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 같은 차에 탄, 영부인을 제외한 유일한 사람이 김경수 지사였습니다.

고척돔, 그때 후보 경선 당시에 영부인께서 ‘경인선 가자’는 이야기를 다섯 번 외친 동영상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동영상은 못 봤습니다.

○**김재경 의원** 저기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다섯 번이나 외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인 백원우가 드루킹이 추천한 영사후보자를 면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문답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김경수 지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만났지 그것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를 들으면 청와대

특감반에서 드루킹 USB와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그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국민적 의혹이 이럴진대, 실제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여론은 갈수록 비등할 텐데 특검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글썽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린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불쌍한 김경수, 안 나가려는데 등 떠밀어 걱정하지 말라고 출마시켜 놓고 모든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길은 특검으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천하의 질서는 신비로운 것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실패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틀어쥐고 흔드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지울 하락, 국제적인 신뢰 상실,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직시하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국회에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새로운 기운, 봄 기운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정말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고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국정 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경찰 이런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국민,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대한민국 바꾸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 이 사건들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거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무부장관님, 검찰, 경찰, 행안부장관님께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은폐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일선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 또는 그 당시의 검찰 간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찰에 경찰이 송부한 3만 건 자료가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당시 행정관이 국과수를 방문하고, 경찰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압력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박관천 당시 행정관은 ‘김학의 차관 임명 강행에는 최순실이 있다’. 이 수사 끝나고 경찰 수사 라인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단순히 수사 검사의 잘못 혹은 김학의 차관과의 인연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를 그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가 종결되고 나면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실제 규명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 1차·2차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의원 그리고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개입됐는지가 반드시 수사되어야 되겠

고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장관님 재임에 법무부차관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썸, 가정적인 질문이신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김종민 의원** 아니, 이건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잠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보면……

그다음에 보고 대상 좀 보세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 혹은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맞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뭐……

○**김종민 의원** 이 규칙대로 한다면 아마 장관님한테도 차관 혹은 법무부의 주요 간부가 이런 사건에 연루했다면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속 법무부의 차관 또는 실·국·본부장 등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알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국민들이 청와대, 법무부장관, 그 당시의 지휘 라인에서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반드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총리께 꼭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되는데, 헌법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얼마 전에 교섭단체대표연설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정책이다, 사회주의이다, 좌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저도 그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제정책이 위헌이라는 건 헌법 제119조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헌법 제119조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균형 성장, 소득 분배, 경제적 지배력의 남용 방지 등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119조 1항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 하고 있으니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신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법률가 이시기 때문에 2항도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라고들 하시는데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의 불인정, 두 번째는 중요 산업의 국유화, 세 번째는 일당 통치지요. 이 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속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만큼,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원내에도 6개 정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중요 산업이 국유화됐습니까?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종민 의원**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내용상으로는 총리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색깔론이 참 오래된 고질병인데요 경제·민생 문제에도 이런 색깔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걸 뛰어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이런 정책들…… 일자리와 임금은 시장에 맡기지 왜 정부가 개입하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좀 띄워 주세요.

헌법 32조 1항입니다.

국가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이 위헌적이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래요? 어떻게, 제가 질문할까요, 질문하실래요?

헌법 32조 1항, 국가의 의무입니다.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임금이나 고용 문제는 민주공화국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일자리에 개입했다, 임금이 개입했다, 최저임금에 개입했다, 이게 사회주의다…… 이거 헌법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총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헌법 2항에 불평등, 불공정을 국가가 막아라, 이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종민 의원 1항에 자유와 창의를, 2항에는 공정과 상생, 이 두 바퀴가 민주공화국 경제의 두 바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더구나 경제민주화는 전직 대통령님의 최대의 선거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종민 의원 이 두 번째 경제민주화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첫 번째 자유와 창의를 뭐가 가로막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독점 자본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김종민 의원 불평등, 불공정, 누가 혁신하겠습니까? 누가 자유롭습니까?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 하에서 누가 창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루스벨트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종민 의원 미국의 재벌 독점이 미국 정부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루스벨트가 들어서서 경제 혁신을 했습니다. 반독점법, 금융혁신법, 노동개혁법…… 루스벨트가 없었다면 실리콘밸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자, 상생하자…… 그래서 최저임금, 대·중소기업 상생…… 이것 왜 하는 거지요? 자유와 창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 도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창의롭게, 특히 돈 없는 사람들도, 혼자인 사람들도, 중소기업들도 도전할 수 있게, 창의롭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공정경제, 상생경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의원님께서 루스벨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공황 이후에 등장하신 프랭클린 루스벨트보다는 20세기 초에 집권하신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안티트러스트법, 셔먼법, 독점규제법, 재벌해체 등을 시행하셨고요. 그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네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김종민 의원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 자유를 강조하시는 나경원 대표님, 우리 자유한국당,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정말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공존의 가치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공존민주주의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년 인류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민주공화국 200년, 200년 동안 수많은 자유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대원칙이, 이 자유와 공존의 두 바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민 의원 마지막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야 4당이 선거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로 받아들이자, 연동제를 도입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존중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 타파하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들어오다 보니까……

자료,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의원님들을 내 손으로 뽑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나경원 대표님도 비례대표제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뽑아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이회창 대표가 뽑았나요? 아니, 그렇게 뽑으셔서 비례대표로 지금 원내대표까지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비례대표 의원님들 보면, 우리 당은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저는 한국당 17명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저 플래카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법에 유불리가 있다고 봅니다. 큰 정당이 좀 불리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는 이익입니다. 국회 전체에는 이익입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그래서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 지역주의 정치, 이것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존의 정치, 협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몇 석 연연해서 같이 죽지 말고 좀 손해 보더라도 함께 사는 길로, 대한민국 사는 길로 가자, 이게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런 정치를 위해서 함께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선거법은 국회 내의 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광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광상도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외손자는 동남아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것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이유와 그 배경에 정권의 비호가 있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장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딸 가족은 이미 3일 전에 동남아 국가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 없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해 주도록 민정수석에게 지시하는 코미디를 연출한 것입니다. 이미 출국한 딸에 대해 감시를 지시하니 민정수석실에서는 손을 놓았고 구기동 빌라를

부부가 정리한 후 매각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친인척을 감찰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만 현 정부는 2년이 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관, 민정수석실도 감찰을 방치하고 있고 특별감찰관도 없으면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해야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먼저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지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의원** 장관, 이렇게 공식이 되면 누가 감시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이 감시의 대상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가족의 어떤 사생활적인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광상도 의원** 기관이 이렇게 양쪽이 다 손을 놓고 있으면 없을 때는 누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것을 무슨 범죄 사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감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상도 의원** 이런 때를 대비해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소신껏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나서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 임명을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미국 법무부장관은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임되는 등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 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반면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이런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 지난번 정부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서도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

문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특검법입니다.

○**곽상도 의원** 발동 안 됐다고 하면 영원히 안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장관이 소신껏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장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을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들어가세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교부에서는 6급 공무원 1명이 동남아 파견 근무 하면 숙소비 등으로 해서 연간 최대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호실에는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 12명 경호한다면 추가비용이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리, 사위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수입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정부가 이만한 경호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급여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이만한 경호비용을 들여야 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누구의 수입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곽상도 의원**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사유였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곽상도 의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 9일 인도 국빈방문 당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고 밝혔고, 그런데 그 딸 문다혜 씨는 불과 이틀 뒤 교육 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 신고했습니다.

총리, ‘내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 한다’는 대통령의 인도 연설은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게 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라면 딸은 국내에 있으면서 교육 당국에 해외이주한다고 허위신고한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대통령과 정례회동 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곽상도 의원** 사실 여부 물어보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정도의 문제가 국정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곽상도 의원** 대통령의 연설이 허위면, 사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혀야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자녀라 해도 사생활이 있을 겁니다. 위법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곽상도 의원**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도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고……

○**곽상도 의원** 대통령의 연설이 사생활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생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사생활을 언급하더라도 대통령 연설이 되면 다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작년 4월 대통령 사위 서 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굳이 아내인 문다혜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문다혜 씨가 빌라를 5억 1000만 원에 매도했는데 해당 빌라가 매물로 나온 적 없다고 하고 대략 거래된 가격은 4억 2000 내지 4억 5000 선이었다고 합니다. 왜 시세보다 비싸게 샀는지 물어보려고 하니 이 사람이 언론 접촉을 피한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오고 간 부정 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것이 어떠한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곽상도 의원**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위법이나 탈법이 있다고 보

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의원** 지금 이 차액이 상당하지 않을까?

○**국무총리 이낙연** 글썬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법·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사위 서 씨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는 사위가 입사하기 전 300만 원에 불과했던 외부차입금이 입사 이후 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위가 퇴사한 이후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탈락했고 현재는 법적인 문제로 법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를 다녔던 사위가 이 회사에서 자금 차입의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외부차입금을 변제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토리게임즈는 차입금을 변제한 흔적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자금 차입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등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한 기사는 봤습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투자 이후에 오히려 사업이 잘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만약 대통령의 가족이어서 누가 봐주었다면 사업이 잘됐어야 옳지 않을까요?

○**곽상도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게 사위가 퇴직한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착각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사장의 기자회견만 봤습니다.

○**곽상도 의원** 대통령께 한번 여쭙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국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 대통령 사위가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딸 문다혜 씨에게 구기동 빌라를 증여한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는 바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 다시 화면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토리게임즈에 자금을 차용해 준 플레너스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김진호라는 사람이 만든 케이런벤처스라는 업체는 자본금 6억 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만 설립 2년 만에 480억 원의 정부 출자받는 모태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토리게임즈에 돈을 빌려준 곳이라는 관련성 외에 다른 선정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이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확실하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만약에 밝힐 가치가 있다면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현재까지 청와대는 언론 등에 사위가 해외 취업을 했다는니 외국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만 있지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 타이캐피탈그룹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사위의 직원 명패를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이삼 주 전에 회사를 관렸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 전혀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직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정례회동을 한 달에 몇 번 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보통 매주 월요일에 합니다.

○**곽상도 의원** 토리게임즈 사장 인터뷰까지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 제가 질의한 거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한번 대통령께 안 여쭙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했고 이상직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곽상도 의원 총리께 제가 묻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 항공사란 어떤 항공사를 말합니까?

○곽상도 의원 이스타……

○국무총리 이낙연 이스타에 따르면 해외에……

○곽상도 의원 ‘이스타항공에 따르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스타항공. 이상직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어떤 항공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이스타항공 쪽에도 총리께서 물어보시거나 답변을 들으신 거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우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시다.

○곽상도 의원 보고받으신 거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우리……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보고를 받고 있으시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알아봤습시다.

○곽상도 의원 태국 자본, 태국 자본 타이캐피탈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다음에 또 추가로 내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 사실이라고 하면……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도 어떻게 설명해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곽상도 의원 어떤 논란을 일으키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지요.

○곽상도 의원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지금 총리께서 ‘위법이 아니라면’으로 가정해서 얘기하셨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곽상도 의원 위법인지를 알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위법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하시는 분이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총리.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곽상도 의원 모든 자료는 다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 낸 데 보면 거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애 아버지가, 사위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강남 우리들병원에 작년 10월 24일경 입원했던 문다혜 씨 건강보험 급여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건보 이사장은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라면서 자료제출을 지금 거부합니다. 문다혜 씨는 감찰 대상이자 국민 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입니다. 개인정보라며 정부가 나서서 숨겨 줄 게 아니고 사실인지 떼뻑이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이 문제인지요?

○곽상도 의원 한 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곽상도 의원 한 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뭘 챙겨 줬지요?

○곽상도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챙겨주고 사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직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설 쓰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직 전 의원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기업을 경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에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감찰의무와 관련하여 극도로 무능하거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내 편인 인사들을 심어 놓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시행하고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해 마구 잡이식 감찰을 벌이면서도 정작 해야 될 대통령 친인척 감찰은 피하는 나라,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용**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열차가 막바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겠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약속 지키겠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뺀 말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말꼬리를 잡아 왜곡하고 국민 무시 운운하며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 5당 합의를 했는데 패스트트랙이 임박하자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정반대의 계약안을 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민

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협치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이 어떤지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에 이해찬 대표께서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셨습니다. 4공 때 야당 입막음하려고 만든 악법을 촛불정부의 여당 대표가 입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을 욕한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우리 안의 비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평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이 두 차례씩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온 국민이 염원을 모아 평화의 공든 탑을 쌓아 가고 있는데 돌 하나 떨어졌다고 탑을 통째로 무너뜨리자는 냉소와 비관주의,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놓여진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면서 그러나 평화를 향한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구체적인 해법에 있어서도 일괄 타결이나 단계적 해법이냐 하는 이분법에 갇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해서 그에 대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구체적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하고 북한도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이 모두 매력을 느낄 만한 로드맵 시안을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틀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도 큰 의견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최종적인 목표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해체에 두고 거기까지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데에는 큰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단계, 특히 첫 단계의 이행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기대치의 차이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합의 연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엇그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나온 모종의 구상이 바로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점에서는 추 의원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의원** 우리의 중재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고요.

또 좀 점검해 볼 사안도 있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점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는데요. 가장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자신감 있는 또 긴장감 있는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느슨한 점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점이였을까요? 하노이 때 얘기인……

○**추혜선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하노이는 이렇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폼페이오와 우리 강경화 장관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와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사이에 부단하게 소통이 있었고요. 비건 특별대표와는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직접 만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간 합의서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워낙 톱다운 방식이어서 그때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추혜선 의원** 한 번 더 대통령께 건의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도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복기하고 있고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 유엔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저희 정부 내부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제재 위반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재의 틀 안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도 분단국가의 어떤 경제적 완충지 모델로서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당시에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그런데 유엔안보리 제재로 경제 협력이 금지되기 전에 박근혜정부가 자의적으로 폐쇄 조치한 것이라는 점, 저는 국제사회에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서 금강산 관광 하루속히 좀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과 유엔안보리를 적극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근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단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의 반입은 제재 면제 대상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추혜선 의원**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검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을 놓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실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이 허용됐다 이것입니다.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전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 그동안 술한 의혹과 범죄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이 나서야 사법 당국이 의지를 보이는 지금의 상황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의원 부끄럽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추혜선 의원 먼저 버닝썬 사태는 연예계와 공권력의 유착비리와 성폭력으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1일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제의 카톡방, 경찰이 증거인멸까지 해 가면서 비호했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이 SBS가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의 대화 내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만 약 20만 건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이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더 많은 범죄사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준영, 승리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제출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2016년 정 씨 수사 당시에 경찰이 직접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시다.

○추혜선 의원 그런데 또다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수사 단위를 높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초기단계의 수사를 관여를 못 하게 하고 서울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해서 오늘 날짜로 152명으로 수사단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로 그렇게 오늘 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러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좀 묘연해 보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지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신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자연 씨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 씨,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런 사건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이런 외침을 계속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혜선 의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진실만이라도 밝히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살려 달라는 절규에 응답하는 국가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 사건에 대한 과거의 검찰 수사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남긴 채 오늘에 이른 점에서 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 앞에 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장자연 씨의 경우에 조선일보 방 씨 일가가 거론되면서 순식간에 사건이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 사건이 암전됐다고 표현했습니다. 1년 치 통화 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수첩 복사본과 같은 사건 증거물들이 통째로 사라졌으니까 이 거대한 힘이 사건을 묻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김 차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청와대 개입설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디지털 자료 3만 건이 누락된 것도 드러났고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들의 주장, 피해자답지 않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런 부실 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특정 개인보다는 어쨌든 향후의 진상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서 부실 수사 사실이 확인되면 당시의 어떤 수사 라인에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리고 고 장자연 씨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2008년 통화 기록, 당시 검찰 수사팀이 확인했지요? 그런데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건데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조사단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나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요 보고서 문건을 작성을 하면 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에 관해서 토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과거사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라든가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같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위원회와 조사단이 협의해서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저는 장관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검찰의 잘못을 확인해 반성하고 개혁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사위원회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추혜선 의원** 이것마저도 그렇다면 국민 신뢰 어떻게 회복하시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사실 이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간에 보고를 받거나 개입을 하지 않는 방침을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조사를 하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절차를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러한 의혹이 밝혀질 수 있는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의 자격 문제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 당장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위원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

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탈원전 정책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화력발전소를 늘려 미세먼지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잊은 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부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 기억이 맞다면 2024년 이후가 될 겁니다.

○**추혜선 의원** 예, 11년 뒤에나 있을 일인데 이 가짜뉴스의 생산처를 황교안 대표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주장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 안타깝습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라도 내는데요. 정치 지도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타깝고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전 가동 기수나 발전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됐던 석탄화력발전소 11기가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혜선 의원** 적극적으로 해명을 정부 차원에서 하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탈원전에 있어서 일자리 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구조조정 때마다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전밀집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요. 대체 일자리 마련과 이직 지원도 해야 됩니다.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탈원전 로드맵, 정부가 지금부터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책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원전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 미래에도 소용이 되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원전밀집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의원 총리께서 방향을 잘 잡고 계셔서 좀 안심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추혜선 의원 올해의 첫 국회 일정을 3월에야 시작하게 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극우·친일·냉전 집단에 다수 의석을 내 주지 않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 항상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주승용 추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권력의 비호와 유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진실을 호소하고 넘치는 증거를 갖다 쥐도 수사기관은 약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강자를 비호하는 조사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딸과 아들 또 그리고 혹은 이웃이 아무리 하소연해도 진실에 접근은커녕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힘을 써 주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오늘은 총리에게만 묻겠습니다.

경찰이 2013년 7월에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분명했다’라고 경찰청장이 발언도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조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리, 김학의 사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 주신 세 개의 뉴스 생산 문제, 검찰과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만 그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몇몇 개인을 살리려다가 조직을 죽일 것이냐, 몇몇 개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양단간에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호 의원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자기들하고 함

께 일한 상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해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의 수사와 기소 체제에서는 바로 말씀하신 그런 취약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이대로 김학의 사건이 묻힌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질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마저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리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수사를 지금 말고…… 수사 단계가 아니지요.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활동 중이고 그 활동이 2개월 연장됐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명운을 걸고 좋은 결론을 내 주기 바라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 누굽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까 많이 나온……

○**박재호 의원** 나온 이야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재호 의원** 또 김학의 사건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많이 보도……

○**박재호 의원** 많이 보도 봤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재호 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 라인에서 다 보고는 받지요?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재호 의원** 이번 사안의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혹시나 압력을 넣었다든지 연관이 있다면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혹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김학의 사건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줬거든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공수처법의 필요성은 동의하고요. 바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김영삼 정부도 공수처를 만들려 했다, 결국은 안 됐지만요. 과거의 이회창 총재님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재호 의원** 이번에 대선 할 때도 양당이 다 공약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의원** 총리께서 장자연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은 모르지만 큰 열개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시다. 누군가 장자연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어찌 보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력 언론사 집안과 수많은 연관성이 밝혀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치부되어 버렸고요. 또 재벌 기업가와 정치인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도 어김없이 검찰의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권력과 언론이 유착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적폐를 청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만 보면 이 사건이 제일 큼니다. 이 사건은 증거인멸, 부실 수사, 수사 방해, 권언유착, 허위 보도로 점철되고 있거든요.

총리,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넓은 의미의 권력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개입되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동안에는 그것이 덮여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하는 여성 한 분이 외로운 싸움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외로운 싸움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장자연이라는 꿈 많은 신인 배우가 삶을 포기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뿜었던 피맺힌 절규를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가 이제

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가 거대 언론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리,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으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병리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성역 없는 수사로 이 사건의 전말을 명백히 국민들에게 밝혀서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내서 사회지도층의 새로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리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 총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버닝썬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재호 의원 버닝썬은 현 정부에서 첫 수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발생한 정권입니다. 마약, 성폭력, 경찰 유착, 세금 탈루라는 네 가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다른 두 사건에서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의 은폐, 비호, 묵인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었든 가리지 않고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사건은 국민의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고요, 장자연 사건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권언 유착을 막아 달라는 명령이면서 버닝썬 사건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경찰·언론·정치인이 서로 유착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은 그 어디에도 갈 곳이,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 특권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총리, 부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재호 의원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이 없습니다. 둘째, 위험합니다. 셋째, 확장성이 없습니다. 넷째,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소음피해 여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심각한 환경 훼손이 걱정됩니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부울경의 요청은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해서 제2의 4대강 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부울경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큼니다. 지난 1월에 총리께서 직접 대구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조정하라고 지시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재호 의원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도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대구공항의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1월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이 같이 제 방에 오셔서 많은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말과 대구시의 말이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조정하도록 지시했고 실제로 조정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해서 숙제를 주었고요. 이제 곧 그 숙제에 대한 대구시와 국방부의 답을 얻어서 조정을 좀 더 좁혀 가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 신공항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의 무리한 확장은 안 되겠다는 검증 결과를 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부울경 검증단의 결과를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구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우리의 제2도시이고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이자 관문

이라면 그 미래를 위한,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항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그때 당시에 ADPI 조사단에서 발표를 할 때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부울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총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전에 문다혜씨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한 자리 챙겨 줬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글썄요. 아까 듣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거기에 감에 따라서 그 대가로 사위가 어디 취직했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부임이 훨씬 빨랐지요, 시기적으로요.

○**박재호 의원** 그래요.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하산 인사다 뭐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고쳐 내야지요. 또 만약에 대통령제 같으면 엽관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끊임없는 낙하산 인사의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도화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인은 모든 사고의 경계에 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설사 반대편의 생각이라도 좋은 정책이라면 동의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다른 진영의 생각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부패된 자본의 잘못된 관행도 법으로 고쳐 내야 합니다. 그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 상생의 정치라고 할 것입니다.

내 진영의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와 반쪽뉴스에 속아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분노로 가슴 아파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서초출 박성중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렇다면 그보다 규모가 100배 이상 큰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의 관련 증거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지금 항소심에 가고 있지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1심 판결 내용, 170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가 입수한 드루킹의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입니다. ‘경인선은 문재인 정부를 옹립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온라인에서 활동을 했다. 권리당원을 포함해서 6000명이 활동을 했다. 하루 적

게는 83건, 많게는 500건에 가까운 기사에 대응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전국에 걸쳐서 조직력을 과시했다'……

총리님, 드루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작 등 활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문제는 1심은 끝났지만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박성중 의원 2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박성중 의원 총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이 문제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 국민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봐 주십시오.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으로 가자’…… 관계자가 내려가야 한하는데도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치는 우리 영부인, 경인선 존재를 몰랐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뭐라고 물으셨는지요?

○박성중 의원 ‘경인선 가자’고 영부인에게서 다섯 번을 외쳤는데 영부인이 경인선 존재를 몰랐겠느냐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글썽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국민은 다 아는데 우리 총리님만 모르시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화면은 작년 12월 7일 5차 공판 내용입니다. 드루킹은 경인선의 원래 이름은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었는데 문 후보가 발음하기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가 이미 경인선을 인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후보가 경인선에 대해서 몰랐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박성중 의원 이것은 재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재판에 빠져 있는 사안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성중 의원 대선을 하게 되면 수많은 단체가

옵니다. 그 이름까지 거명하고 또 김경수 자체가 여러 가지 수행단장, 정무특보로서 24시간 붙어 있고 또 경선장에 300명 이상을 동원할 정도면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총리님,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고 김경수는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했습니다.

영사 임명을 대통령도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고요 이것도 사법 판단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자리를 제안할 때는 보고하지 않고는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비서관·수석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두 번이나 근무해서 잘 압니다. 만약에 비서관·수석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비서관·수석은 매관매직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작년 7월 25일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 내용 파악을 지시했고 그것도 언론보다 더 빨리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왜 청와대가 나서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USB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혹시 대통령과 관련된 스톱킹 건, 핵심 키가 있을까 봐 두려운 것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김태우 씨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려지리라 기대합니다.

○박성중 의원 김태우 씨의 주장은 텔레그램 방에 지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는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특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드루킹 최후 진술을 보겠습니다.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으로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저희들은 속았다.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자기가 겪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의 없는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도 공범이라고 지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성중 의원 이것도 재판에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추가 사항입니다.

여론조작 피의자가 일관되게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재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김경수 재판 관련 기사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KBS 기사입니다. 댓글을 보시면, 김경수 재판 관련 기사 댓글 상위 10개의 댓글입니다. 그중에 9개가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도 조사해라’, ‘김경수 몸통, 재인 머리’, ‘문재인 대통령 모를 리 없다’, ‘대가리는 죄인이, 몸통은 문치매’, ‘몸통이 김경수면 심장은 그분’…… 많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도 이번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많은 정황 증거가 가리키는 곳이 청와대에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판결문에도 문재인은 무려 9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재특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국회의 민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입니다.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 목소리를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매주 만나기 때문에 ‘보고해 달라’ 또 ‘토의해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특검을 받아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봐주기 은폐수사, 또 20억이 넘는 자본 운영자금 이런 것도 재특검으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총리님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공범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가 금지되어 임기 후에 시효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

○박성중 의원 총리, 대통령의 딸은 사인입니까, 공인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인인 측면도 있지만 사인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공인이면 공인이고 사인이면 사인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성중 의원 사인인데 세금으로 경호해 줍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

○박성중 의원 대통령 딸은 공인입니다. 공인을 하지 않으려면 대통령도 그만두어야 됩니다. 대통령 딸한테 국민 세금으로 경호 이런 관련이 제공되는 만큼 가족의 이주 관련 일반 사항들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의 가족이어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은 있는 것이고요 경호가 붙는 이유는 그만큼 위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호의 가치가 있어서 경호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사생활을 보호하려면 대통령 그만두시고 사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병역 대리신검 의혹이 있습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아 및 흉부 엑스레이 사진 등을 근거로 박 시장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박 시장 아들은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고발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양 박사는 본인의 의사면허까지 걸었습니다. 5년간 재판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 아들은 영국에 거주한 채 5년째 법원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끝날 재검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법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성중 의원 청와대 실장, 수석, 특보, 참모진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본인 재산 4억 신고했는데 딸은 국제고를 거쳐서 연간 1억 원 드는 미국의 한 예술대에 재학 중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렇게 특목고를 비판하면서 자녀 들은 외고에, 아들은 조지워싱턴대에 유학 중입니다. 문정인 특보, 대

북 안보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아들은 미국 국적을 획득하고 병역 면탈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답변해야 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박성중 의원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한국 했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국적이 왔습니다. 장관 마치면 다시 미국 국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딸 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 포기했습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 이중 국적으로 병역 면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디를 보아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고위공직자는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총리, 구소련의 노멘클라투라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구소련 시절 공산혁명 후에 기득권을 차지하며 온갖 특혜와 착취를 일삼은 집권 세력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자녀들이 러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를 좀먹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세력이 제2의 노멘클라투라로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2면 제1은 어디였을까요? 그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드러난 사건부터 엄정하게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총리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 정권 내에서 부도덕한 진보 좌파세력을 견제하고 이런 폐단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은 신발가게, 철물점, 식당, 옷가게, 부동산, 자영업자, 30~40대 직

장인, 취준생, 학부형에 이르기까지 제발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한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성난 파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입니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라고 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국회가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퇴행적 정경유착을 드러낸 재벌도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방임했던 검찰도 정치 개입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도 큼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서슴없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 활동을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난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사항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덕목이 진보나 보수나가 아니라 통합된 리더십으로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보·보수, 우익·좌익, 친일·종북 이런 갈등을 야기하는 정쟁을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셨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때 외국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이배 의원 그러면 혹시 대통령께서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전체를 다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뵈었는데 국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채이배 의원 총리께서 대통령께 고언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것……

○채이배 의원 뭔가 정부의 어떤 쓴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대통령님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더 현실 또는 현장을 중요시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누구든 또 정권이든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과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주변의 그런 조언과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꺼이 수용하실 때도 있고 또 당신의 신념이 확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를 설득하시고 그렇습니다.

○채이배 의원 저는 그런 자세가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자세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곁에 계신 총리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유은혜, 조명래, 조해주 등 이 장관급 인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검증의 부실을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채이배 의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장관후보를 제청하는 총리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당연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후보를 놓고 여러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분을 최종 후보로 고르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저는 단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국토부 후보자로 올라온 최정호 후보자 역시 다주택을 보유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만일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청문회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지 또는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지 하는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지명을 철회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이배 의원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었을 때 부적격 의견이 나와 있다면 충분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도 조윤선, 이철성, 김재수, 현오석, 윤진숙, 최문기, 이경재, 문형표 등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전형이라는 불통정권의 끝을 보여 준다고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례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후순위인 임원의 아들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서 최종 선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사례인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어떻습니까? 서류심사에서 9등을 했지만 5명의 면접대상자로 올라와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용비리 사례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를 했던 그 채용비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 사정을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환경부의 그 문제는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채용비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사안이라면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과학기술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왔습니다. 키스텍(KISTEC)과 원자력연구원의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기부의 압박으로 임기를 앞두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사퇴 중용 당시 청와대의 결정임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며 사태를 강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로 반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블랙리스트라고 말씀을 하십니까는 인사권자가 기관장, 산하기관장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을 조사해서 분류하고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공적인 책임을 갖는 사람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낙

하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국회가 조속히 이 낙하산 방지법을 마련해야겠지만 현행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관에 따라서 기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임 인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총리님께 다시 한번 현행 법률과 기관의 내규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님,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신 분은 소수이고요 그리고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임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임기를 다 마치셨고 어떤 분들은 임기보다 더 오래 재임하신 분도 계십니다. 총리실에는 저희보다 한 20년 전 정부 때 정치적으로 오신 분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채이배 의원** 임기를 더 오래 하고 계시다는 분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임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법률과 내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토건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을 내놓으셨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민자적격성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토건 경기부양 정책으로 바뀐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고요. 예타 면제는 기존 예타제도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업들을 골라서 예타 면제라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난 정부도 똑같은 변명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며 그 피

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호소문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또 박근혜정부에서 누리예산 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을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공약 바꾸기, 말 바꾸기, 정책기조 변화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나서서 더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미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고요. 4대강 사업이나 또는 직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과 비교하시는데 4대강 사업이건 또는 직전 정부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건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이배 의원 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번 정부가 말 바꾸기 하고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그 정도로 구체화돼 있지는 않고요.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채이배 의원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도 부자 감세라며 절대 반대한다는 논평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홍종학 장관, 현재 후보자인 박영선 의원까지도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되면서 부자를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리고 대통령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인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속히 개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이 대통령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시는 것처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작년 11월에 열려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고 그 많은 합의가 상당한 정도까지 이행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월에 열기로 됐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기돼 있습니다. 빨리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구성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모시고 대통령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채이배 의원 이런 국회와 정부의 협치 이게 더 나아가 국민의 뜻을 더 잘 받드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2월에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협조를 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대통령께 고언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우선은 작년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니까요, 그 합의를 국회에서 먼저 이행해 주시면 정부도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용 채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의 날입니다. 정치에 관한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이 높고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의원은 높은 사람은 적어도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또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국가와 국민 앞에서 중요한 일을 찾기보다는 상대의 약점과 험뜯는 소재만 찾기에 열중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모두가 박수를 받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지난 2016년 12월 9일, 바로 831일 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당시 민심의 명령을 받아 준 새누리당 의원 예순두 명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제1야당의 원내대표님도 박 대통령의 탄핵이 민심이고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탄핵에 동참하셨던 기억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국정농단을 막아 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국민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민의의 전당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여야 할 것 없이 831일 전에 칭찬받았던 국회의 모습으로 제발 일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우리 모두 받아들이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낙연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발언했던 의원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1야당이 뽑힌 지가 벌써 한 3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1야당 지도부에 구체적인 제안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금 그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어쨌든 국회는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장이어야 되고 또 지난 8월과 11월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모에서 보면 다시 한번 여야정 상설협의체, 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저녁을 모시겠다고 제안드린 지가 몇 주 되는데……

○강훈식 의원 아직 답변이……

○국무총리 이낙연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아직 답변이 없으시군요.

청년에게 우리가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파서 청춘이다라고 조언할 때가 아니라 청춘의 아픔을 보듬는 정부 또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년 정책을 말하는 야당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마는, 여당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인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서 일자리 대책, 주거지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청년 실업체감률은 23.2%로 전년보다 1.4%p 상승했습니다. 취업 관문을 통과해도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절반 가까이,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50점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청년 정책은 고용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모든 수치가 그것으로 청년의 삶을 재단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인 목표보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청년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정부 내의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청년 정책을 전담할 기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청년 정책은 부처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년 정책은 여가부에 가 있고 청년의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그리고 청년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또 교육부에 가 있습니다.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년에 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요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걸 한꺼번에 볼 그리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협의 중에 있다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오늘 남북 정상회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미국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중국과의 소통도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일본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의 로비로 하노이 합의가 지연됐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 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요 북·일 정상회담도 물론이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한 물밑의 대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이면 일왕 취임 축하행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때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본에 모이게 될 겁니다. 올해 6월에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고요. 10월 하순, 10월 22일에는 새 일왕의 취임 축하연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두 번의 국제적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살리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라도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의원** 그런 대외적인 외교 문제와 동시에 저희가 남북협력사업을 계속 하는 문제가 오늘 많이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개성공단 중단이 3년 됐는데요 사실은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은 절차적으로 풀리기를 기다렸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어쨌든 계속 재산권은 보호를 못 받는 측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방북 허용을 우리가 불허했던 지점들이 그런 면에서 있었던 건데 이제 방북 허용, 향후에는 좀 개방적

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분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북에 놔두고 온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공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그러한 문제도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그 문제도 추진되고 이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식 의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월 국무회의에서 24조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했고 또 신속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과거의 대규모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토목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사업이 평택-오송 제2복선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천안·아산에 왜 멈추지 않는가 하는 지역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천안·아산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총리께서 전체적인 국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안이 지하 건설을 하겠다는 현재 우리 국토부 입장의 안입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가다가 지하로 가거나 지하로 가거나 지상으로 갈 경우 이게 감속 구간이 불가피해집니다. 고속전철의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 물론 대피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하로 최장 190km 가까이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오송까지 연결될 경우에 분기점에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강릉에서의 사고도 분기점에서 났습니다. 보통의 사고는 분기점에서 나는데 지하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굉장히 처리가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 보시면,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지상으로 원안에 있는 것과 함께 놔

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지 안전 문제나 속도의 측면이나 본연의 기능의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셔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KDI가 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토부 안은 효율성을 중시한 안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KDI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우선 안전성도 비슷한 비중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천안·아산 정차의 적정성 여부 그것도 함께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의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역사가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고, 사실은 국회 안에서의 논란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고 미래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계획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총리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반민특위는 제헌헌법에 따라서 1948년이었던가요, 그때 구성이 됐지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무산시켰고 모처럼 진행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리 문제가 그것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민특위의 무산과 친일 청산의 중단이 두고두고 그 훗날의 역사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반민특위의 무산과 친일 잔재 청산의 중단이 우리 민족주의의 중단을 낳았고 좌절을 낳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은 왜곡을 낳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훈식 의원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 이미 총리께서 여러 군데에서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만 국회 내에 합의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강훈식 의원 한반도는 70년 만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4차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자고 여야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의 말씀을 죽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도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기라면 그것은 여당 혼자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당도 힘을 합쳐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은 문제인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정부는 여당이 끌어 나가겠습니다만 야당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831일 전에 박수 받던 국회의 모습이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용 강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야당도 여당한테 잘했다라는 찬사 보내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문제인 정권 이후에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의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를 근본 가치로 하는 그리고 시장경제를 경제 작동의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를 걱정하는 야당입니다.

3대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됐습니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놓고 우리 대통령이 그나마 붙들고 있

던 중재자, 당신은 중재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사랑, 짝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일자리 증발하고 경제성장률 떨어집니다. 거리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살려만 달라고 합니다. 어려워도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 보기 민망하고 취업 안 되는 자식들은 부모님 뵙기 민망합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만 켜면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일이 온통 방송과 신문 지상을 뒤덮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해외순방 갔다 오시자마자 엄정 수사, 수사반장이 되셔서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폐로 매도합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전 것을 파내서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자신들은 순백하고 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면 팔수록 자신들의 허물은 태산과 같고 저 사람들이 과연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한 장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뭘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평양에서 두 분이 차를 타고 달리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전희경 의원 어디 실렸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내 신문들에 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희경 의원 국내 신문도 인용을 했는데요. 어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안 보이는데요,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유엔 대북제재위의 연례보고서입니다.

저 벤츠는 사치품이고 반입금지 품목인데 우리 대통령 얼굴까지 저렇게 전 세계인이 제재 위반한다는 데 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이 이 차를 타신 것이 제재 위반이 아니지요. 제재 위반을 말하고자 하

는 것은 이 승용차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전희경 의원 납득이 되는 설명일까요?

우리 대통령은 왜 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 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전희경 의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희경 의원 북한의 현 상황도 모르는 채 평화 놀음에만 집착하면 저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는 실종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이 내용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로 봤습니다.

○전희경 의원 어떤 내용을 주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충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하시지요.

○전희경 의원 아니, 총리님 입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저를 질책하시건 질문하시건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질문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전희경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총리님의 모든 발언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발언을 후대까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기억합니다.

○전희경 의원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발언도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전희경 의원 평창 올림픽 전에 대북 비판 막고 탈북민단체에 자금 지원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한민국의 인권 탄압 사례

로 실렸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하시기가 참 아팠나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중에 오보도 있었습니다.

자금 지원은 절차에 따라서 형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제가 전에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서 탈북민을 만나셨느냐고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만나셨습니까, 그 후에?

○**국무총리 이낙연** 기억을 못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만나셨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희경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자세한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 기억하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전희경 의원**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로 기억을 합니다.

문제인 정권에서 탈북민은 북한 김정은의 시선대로 배신자입니까? 그래서 안 만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과거에 탈북민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전희경 의원** 대통령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참 무책임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안보·경제 참상의 원인은 모든 것을 정치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살고 죽는 문제인 안보마저도 정치화합니다.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으로 나뉘어서 이분화해서 생각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사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의사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셨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희경 의원**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됐을 때라야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상황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안 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상응조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대 차이가 드러난 것이 하노이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전희경 의원** 국민들도 보는 눈과……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한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의원**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습니다. 외신도 다 자유롭게 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될 때 총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전희경 의원** 그게 총리로서 온당한 답변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면 총리가 몰랐어야 될까요?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전희경 의원** 아니지요.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셨어야지요, 왜 그 상황이 됐는지.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알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의원** 일본은 30분 전에 회담 진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얘기했습니다, 일본 외무상. 우리나라 총리는 그 정도가 안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 외무상의 발언 내용을, 그 진위를 제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불리한 것은 진위 파악이고 정권에 유리한 것은 진위 파악 여부와도 상관없이 다 프로파간다(propaganda)만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아니라 고노 외상의 그 발언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의지는 바로 그런 현실 인식 위에서 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평화의 정착이고 비핵화의 완성입니다.

○**전희경 의원** 제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느끼

는 것은 아마 총리께서도 정권에 유리한 기사, 당장 속 시원한 기사만 발췌 보고를 받으시나 봅니다. 중요한 정국 현안과 국제사회 동향에 대한 언론 기사는 최소한 체크하셔야 되는데 기초가 안 되어 계시는군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의원님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균형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목표 속에 그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기업들은 문재인 정권의 규제와 틈바구니와 옥죄기 속에서 혁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혁신적 포용성장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저희들의 국가 목표이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고 욕심처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이 정부에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지금의 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늘 정부 통계가 나오든지 고용통계가 나올 적에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배와 고용의 악화에 대해서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그럼에도 성장통이기 때문에 견뎌라라고 푸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성장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 없습니다.

○전희경 의원 체질 개선에 따른 성장통이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님 말고 이 정권과 정부의 시각을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희경 의원 모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전희경 의원 언론 관계를 안 보시는군요, 언론 자료를.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누가 그 말씀을 했는

지를 말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전희경 의원 찾아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만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희경 의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이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주도성장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명도 있고 암도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뭐지요? 저는 암은 알겠는데 명을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전희경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주도성장은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드리는 것, 또 하나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가계의 지출을 줄여 드리는……

(장내 소란)

그것을 말하라고 하시니 그 분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계의 지출을 줄여 드리는 것, 의료비 경감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 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득을 보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업에 빠지거나 또는 자영업·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이것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국민연금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실업자·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사교육비 폭등하는데 명을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더 말씀드릴까요?

○전희경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말씀하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국가부도 위험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OECD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의 성과는 성과대로 보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그것대로 직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님은 남들이 열심히 달려 놓아서 이어받기의 바통 이어받으신 수치를 말씀하시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객관……

○**전희경 의원** 앞에 댈 사람들은 전부 적페라 그러시고서 이어받은 성적표는 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군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직시하는 것이지요.

○**전희경 의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화제가 되었던 재판을 맡았던 판사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어떤 화제요?

○**국무총리 이낙연** 김정수 지사 1심 판결의 판사 아니었습니까?

○**전희경 의원**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금기어예요? 이 정부의 금기어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금기어가 아니라 아까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속하거나 의원님들에 관한 말도 제가 성함을 거론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아까 공수처에 대한 총리님 입장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의 수사와 기소 체제로는 다 밝혀내기 어려운 취약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런 취약지대를 없애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희경 의원** 이를테면 조국 수석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누구든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 주는 것,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핵심이라고 봐야 할지요, 거기에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희경 의원**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기존의 수사와 기소 체제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역대 정부나 역대 정당들이 시도했거나 공약했거나 했던 것이 공수처입니다.

○**전희경 의원**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공수처 내에서 분리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수사와 기소 체제만으로는,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체제로는 취약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희경 의원**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도 범죄 저지르고 부패하면 누구나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하지요.

○**전희경 의원** 당연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서 왜 그것이 은폐되고 다 밝혀지지 못했던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의원** 버닝썬은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희경 의원** 민정수석실의 실세 총경, 공수처가 있어야만 수사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의심받는 것처럼 지금 정부는 그 누구든 가리거나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지금 조국 민정수석 본인도 수사 대상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가 누구든 비호되거나 은폐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지금 현재 있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상설특검이라든지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만 안 받고 제대로 수사해도 힘 있고 높은 사람,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다룬다는 업무의 제한이 있고요. 상설특검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고요. 특검은 발동될 때마다 정쟁으로 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여야 합의로 만든 그 무수한 제도들의 단점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그러면 지고지선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희경 의원 의원들의 지혜를 왜 조국 수석이 들고 땀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수사 대상이 개혁을 말하니 참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입법 장악의 정점을 찍을 선거법, 언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마는 어떤 것을 답을 드릴까요?

○전희경 의원 저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의 소회를……

○전희경 의원 이해하신 대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치 경험도 많으시니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선거법은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왜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명하신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가 4개 항인가 5개 항인가를 합의했는데 맨 위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들 비판하시던데 의회 무력화에 여야 5당이 합의했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전희경 의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인정, 산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어차피 선거 관리는 행정부의 몫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법이 통과된 뒤의 일이지요.

○전희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의 이해도를 묻는 겁니다, 합의안에 대한.

○국무총리 이낙연 얼핏 이해합니다. 제가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자판 두드리는 사람 이해 못 하는데 자판보다는 이상을 보시나 보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아니라요.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의 제1항으로 내세운 것이 무슨 무슨 비례대표제인데 그것이 의회 무력화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의회 쿠데타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야 5당이 의회 무력화에 합의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의원 4당의 문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작년 12월 15일 합의에는 귀당도 포함됐던 것으로 압니다.

○전희경 의원 그 합의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서구식 좌파 정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속 추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좌파들은 그래도 국가를 잘 끌어가려는 의지라도 있습니다. 상식이 있고 지켜 낼 전통들이 있고 법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나라도 가 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운동이 전부로 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그것이 이 정부의 안보·경제 파탄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기적적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해서 독재의 레일을 깔고 그들만의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힘은 미약합니다. 언론도, 교육도, 심지어 야당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다른 정당도 우리 곁에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께서만 계십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민생 말살, 실패한 좌파독재의 파탄을 막아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전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 의원(268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의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웅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175인)

강병원	강석호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김광림	김기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석	김종회
김중로	김진태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서영교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남인순 노응래 문진국 문희상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희경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대출 박용현 심재권 안상수 어기구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위성곤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완수 유동수 유승희 윤상현 윤영일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주현 윤일규 윤종필 윤준호 윤호중  
 박지원 박찬대 서삼석 서청원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수혁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정현  
 손혜원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이종배 이채익 이철희 이태규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임이자 장병완 전해숙 전희경  
 안상수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정갑윤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정운천 정유섭 정진석 정태욱  
 유동수 유성엽 유의동 윤상직 조경태 조승래 주광덕 주승용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채이배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이동섭 이상현 이완영 이종배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동섭 이완영 이은권 이종배 이철희  
 이만희 이상돈 이상민 이언주 이은권 이종배 이후삼 이준복  
 이석현 이수혁 이원욱 이은권 이종배 이철희 이혜훈 이준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종배 이철희 임이자 장병완  
 이은재 이재정 이종구 이철규 이철희 장석춘 장희경 장정숙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정성호 정세균 정유섭 조승래  
 이춘석 이학재 이혜훈 이후삼 장석춘 장희경 전현희 전혜숙  
 인재근 임이자 장병완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장정숙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우택 정유섭 조승래 조흥영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우택 정유섭 조승래 주호영 최경환(평)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조승래 주호영 최재성 최영표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조승래 주호영 최영표 표창원 함진규  
 조용천 조정식 조훈현 주호영 최영표 표창원 함진규  
 지상욱 채이배 천정배 최영표 표창원 함진규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재성 최영표 홍익표  
 추경호 표창원 함진규 최영표 홍철호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108인)

강길부 강석진 강훈식 경대수  
 광대훈 광상도 김광림 김도읍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세연  
 김수민 김영진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중로 김해영  
 김현아 나경원 노응래 문진국  
 민경욱 박맹우 박범계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인숙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희경  
 신용현 심재권 안상수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상현 윤영일  
 윤일규 윤종필 윤준호 윤호중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수혁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정현  
 이종배 이채익 이철희 이태규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병완 전해숙 전희경  
 정갑윤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운천 정유섭 정진석 정태욱  
 조경태 조승래 주광덕 주승용  
 채이배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청가 의원(19인)

김경진 김성찬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유민봉 유재중 이개호 이정미  
 이주영 정재호 정종섭 조배숙  
 진선미 하태경 홍일표

○국회 참석자

입법차장 한공식  
 사무차장 김수홍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통일부장관 조명균  
 법무부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사법개혁특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2019. 3. 13.

○상설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외교통일	유럽·아프리카	박주선	바른미래당	2019. 3. 18.
		강석호	자유한국당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화체육관광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2019. 3. 15.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9. 3. 18.
	정양석	자유한국당	
외교통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사법개혁특별	박영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2019. 3. 13.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중훈·김종대·김상희·정동영·우상호·추혜선·천정배·박선숙 의원 발의)

3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신경민·강창일·김병기·신창현·김민기·최재성·고용진·송옥주·송갑석·윤호중·윤후덕·전혜숙·이찬열·소병훈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박병석·심재권·김경진·맹성규·최재성·송갑석·신창현·박경미·박정·민홍철·김병기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이완영·김승희·문진국·추경호·이명수·곽대훈·이은재·김도읍·장제원·주광덕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광수·소병훈·서영교·윤후덕·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성일종·정태욱·김태흠·김진태·이종배·주광덕·추경호·박맹우·황주홍·이명수 의원 발의)

3월 14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조경태·황주홍·이종명·송석준·한선교·김승희·이찬열·이상현·김기선·

김경진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영호·김병기·신창현·최재성·유동수·맹성규·윤후덕·김현권·서영교·윤준호·신경민·이규희·박홍근·우원식·노응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윤후덕·김정호·김정우·정성호·유승희·심기준·김경협·박영선·이용득·박정·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동호) 인사청문요청안**

(2019. 3. 13. 대통령 제출)

3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요청안**

(2019. 3. 13. 대통령 제출)

3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학용·김성원·김무성·민경욱·정태욱·김종석·홍문표·정유섭·송언석·주호영·이장우·김정재·김순례·임이자·박성중 의원 발의)

3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요청안**

(2019. 3. 13. 대통령 제출)

3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경대수·이명수·황주홍·김성찬·민경욱·박덕흠·정진석·김성원·권성동·여상규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인사 청문요청안**

(2019. 3. 13. 대통령 제출)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영호·유동수·윤후덕·김민기·김현권·서영교·김병기·신창현·윤준호·박홍근·우원식·박찬대·노웅래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영호·김병기·최재성·윤후덕·김현권·신창현·윤준호·박홍근·우원식·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인사 청문요청안**

(2019. 3. 13. 대통령 제출)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위성곤·맹성규·유동수·윤준호·박정·노웅래·김철민·김두관·윤일규·김상희·손금주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윤준호·박정·노웅래·김두관·윤일규·김상희·김철민·손금주 의원 발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영호·유동수·윤후덕·김민기·서영교·김병기·신창현·윤준호·박홍근·우원식·박찬대·노웅래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영호·유동수·윤후덕·김민기·김현권·서영교·김병기·신창현·윤준호·박홍근·우원식·박찬대·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인사 청문요청안**

(2019. 3. 13. 대통령 제출)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민경욱·김도읍·김명연·정유섭·

이은권 · 김현아 · 신상진 · 박덕흠 · 윤재옥 · 박성중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조배숙 · 천정배 · 신용현 · 박지원 · 이용호 · 장정숙 · 정인화 · 김광수 · 윤영일 · 장병완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신경민 · 강창일 · 고용진 · 김민기 · 김병기 · 소병훈 · 송갑석 · 송옥주 · 신창현 · 유동수 · 윤호중 · 윤후덕 · 이찬열 · 인재근 · 전해숙 · 최재성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이정미 · 김종대 · 김광수 · 천정배 · 서영교 · 윤후덕 · 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학용 · 김성원 · 김무성 · 민경욱 · 정태옥 · 김종석 · 홍문표 · 정유섭 · 송언석 · 주호영 · 이장우 · 김정재 · 김순례 · 임이자 · 박성중 의원 발의)

3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정동영 · 박주현 · 김광수 · 장정숙 · 정인화 · 황주홍 · 조배숙 · 손금주 · 주승용 · 김종희 의원 발의)

3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2019. 3. 13. 윤호중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요구)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2019. 3. 13. 정양석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광대훈 · 광상도 · 권성동 · 김광립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현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경환(한)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요구)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2019. 3. 13. 정양석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광대훈 · 광상도 · 권성동 · 김광립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중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헌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경환(한)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요구)

이상 3건 3월 14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박주민 · 송기현 · 김병관 · 표창원 · 윤호중 · 오제세 · 이재정 · 민홍철 · 이후삼 · 신동근 · 이인영 · 안규백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박주민 · 이인영 · 신동근 · 이후삼 · 안규백 · 송기현 · 표창원 · 윤호중 · 김병관 · 이재정 · 오제세 · 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김현권 · 백재현 · 홍익표 · 서삼석 · 박정 · 설훈 · 소병훈 · 인재근 · 안민석 · 이개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김현권 · 백재현 · 홍익표 · 서삼석 · 박정 · 설훈 · 소병훈 · 인재근 · 안민석 · 이개호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김현권 · 백재현 · 홍익표 · 서삼석 · 박정 · 설훈 · 소병훈 · 인재근 ·

안민석 · 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소병훈 · 홍익표 · 김병관 · 우원식 · 정세균 · 강훈식 · 김종민 · 서삼석 · 박정 · 인재근 의원 발의)

3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가장범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김현권 · 백재현 · 홍익표 · 서삼석 · 박정 · 소병훈 · 인재근 · 안민석 · 이개호 의원 발의)

3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박명재 · 김재원 · 권성동 · 김명연 · 김정재 · 홍철호 · 이완영 · 주호영 · 신보라 · 윤상직 · 장석춘 · 이종배 의원 발의)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석준 · 유동수 · 정성호 · 이종명 · 박주민 · 김진태 · 이개호 · 소병훈 · 박완수 · 김현권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김명연 · 윤종필 · 정용기 · 김세연 · 신상진 · 김승희 · 유재중 · 나경원 · 정양석 · 임이자 · 이만희 · 김규환 · 정유섭 · 이양수 · 강효상 · 이명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김재경 · 조훈현 · 김광림 · 박대출 · 홍철호 · 박명재 · 김선동 · 이채익 · 주호영 · 김한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김상희 · 안호영 · 최재성 · 신창현 · 한정애 · 정인화 · 김종민 · 박찬대 · 소병훈 · 윤소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안민석 · 송갑석 · 윤영일 · 이용득 · 김태년 · 이동섭 · 정세균 · 최재성 · 설훈 ·

윤준호 · 박정 · 정성호 · 이찬열 의원 발의)

3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이현승 · 유재중 · 김정재 · 정태욱 · 이진복 · 신보라 · 유기준 · 문진국 · 임이자 · 홍철호 · 이현재 · 곽대훈 · 박순자 · 김석기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 · 이학영 · 이규희 · 김현권 · 박홍근 · 윤소하 · 윤영일 · 변재일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 · 이학영 · 이규희 · 김현권 · 박홍근 · 윤소하 · 윤영일 · 변재일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 · 이학영 · 이규희 · 김현권 · 박홍근 · 윤소하 · 윤영일 · 변재일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 · 이학영 · 이규희 · 김현권 · 박홍근 · 윤소하 · 윤영일 · 변재일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 · 이학영 · 이규희 · 김현권 · 박홍근 · 윤소하 · 윤영일 · 변재일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 · 이학영 · 이규희 · 김현권 · 박홍근 · 윤소하 · 윤영일 · 변재일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 · 이학영 · 이규희 · 김현권 · 박홍근 · 윤소하 · 윤영일 · 변재일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 2019. 3. 1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15. 정부 제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노웅래 · 김병욱 · 김민기 · 임종성 · 우동수 · 심기준 · 전현희 · 정인화 · 이상현 · 안규백 · 박정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고용진 · 주승용 · 송갑석 · 박정 · 이규희 · 오영훈 · 김병욱 · 신창현 · 변재일 · 이훈 의원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규희 · 송영길 · 어기구 · 강훈식 · 윤일규 · 이인영 · 신창현 · 이상민 · 김태년 · 김상희 · 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전재수 · 신창현 · 이종걸 · 이찬열 · 김병기 · 최인호 · 박재호 · 윤준호 · 김해영 · 표창원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고용진 · 주승용 · 송갑석 · 김병기 · 박정 · 이규희 · 김병욱 · 표창원 · 신창현 · 변재일 · 이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강창일 · 윤후덕 · 이찬열 · 박정 · 안민석 · 윤관석 · 김경협 · 김영호 · 노웅래 · 어기구 · 신창현 · 유승희 · 오영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함진규 · 송석준 · 박덕흠 · 신보라 · 정유섭 · 김학용 · 김성원 · 주광덕 · 윤재욱 · 송희경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종구 · 박명재 · 이현재 · 박성중 · 추경호 · 박덕흠 · 주호영 · 김중석 · 신보라 · 윤종필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권철승 · 신창현 · 박정 · 이훈 · 이후삼 · 정재호 · 김철민 · 안호영 · 황희 · 김병욱 의원 발의)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종배 · 광대훈 · 정태욱 · 성일중 · 김상훈 · 김규환 · 유민봉 · 윤종필 · 박명재 · 이완영 · 추경호 · 이현재 · 하태경 · 홍일표 · 황영철 · 이주영 의원 발의)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심재권 · 유승희 · 이수혁 · 송옥주 · 고용진 · 설훈 · 서형수 · 이인영 · 황희 · 신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홍문표 · 성일중 · 정유섭 · 김성태 · 김영우 · 최교일 · 이명수 · 안상수 · 김기선 · 이종명 · 김상훈 · 김재경 의원 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윤영석 · 이채익 · 박맹우 · 김상훈 · 이종배 · 이현재 · 박완수 · 김한표 · 정갑윤 · 박성중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권철승 · 신창현 · 박정 · 이훈 · 이후삼 · 정재호 · 김철민 · 안호영 · 황희 · 김병욱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소병훈 · 서삼석 · 이용득 · 송갑석 · 홍익표 · 임종성 · 신창현 · 김병기 · 변재일 · 우원식 · 신동근 · 설훈 · 인재근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규희 · 송영길 · 어기구 · 강훈식 · 윤일규 · 이인영 · 신창현 · 이상민 · 김태년 · 김상희 · 박홍근 의원 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소병훈 · 서삼석 · 이용득 · 송갑석 ·

홍익표 · 임종성 · 신창현 · 김병기 · 변재일 · 우원식 · 신동근 · 설훈 · 인재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김관영 · 주승용 · 신용현 · 김삼화 · 최도자 · 유의동 · 전해숙 · 임재훈 · 하태경 · 김수민 · 채이배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소병훈 · 서삼석 · 송갑석 · 홍익표 · 임종성 · 신창현 · 김병기 · 변재일 · 우원식 · 신동근 · 설훈 · 인재근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김관영 · 주승용 · 신용현 · 김삼화 · 최도자 · 유의동 · 전해숙 · 임재훈 · 하태경 · 김수민 의원 발의)

이상 9건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윤후덕 · 김경협 · 정세균 · 정춘숙 · 강훈식 · 안민석 · 이찬열 · 박홍근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박재호 · 김병관 · 전재수 · 어기구 · 김해영 · 송기현 · 이용득 · 이훈 · 최인호 · 위성곤 · 김현권 · 안호영 · 유승희 · 황희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박재호 · 김병관 · 전재수 · 어기구 · 김해영 · 송기현 · 이용득 · 이훈 · 최인호 · 위성곤 · 김현권 · 안호영 · 유승희 · 황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김도읍 · 유기준 · 이완영 · 김석기 · 김기선 · 김태흠 · 민경욱 · 주호영 · 박인숙 · 윤재옥 의원 발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훈 · 박정 · 김병관 · 손혜원 · 송갑석 · 권철승 · 이원욱 · 고용진 · 박재호 ·

정세균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김학용·김종석·추경호·홍문표·  
김무성·신보라·김성원·김동철·한정애·  
민경욱·강효상·정태욱·성일종·박순자 의원  
발의)

3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용득·김병욱·안호영·윤후덕·  
김경협·정세균·정춘숙·강훈식·안민석·  
이찬열·박홍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이용득·김병욱·안호영·윤후덕·  
김경협·정세균·정춘숙·강훈식·안민석·  
이찬열·박홍근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이용득·김병욱·안호영·윤후덕·  
김경협·정세균·정춘숙·강훈식·안민석·  
이찬열·박홍근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위성곤·박주현·이개호·김철민·  
홍문표·설훈·김현권·박재호·오영훈·  
황주홍·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박홍근·안호영·김철민·윤관석·  
이후삼·이용득·서영교·서삼석·강훈식·  
김상희·윤준호·신창현·김병기·박찬대·  
유동수·여기구·노웅래 의원 발의)

3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정유섭·강석진·강석호·강효상·  
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립·  
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  
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  
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  
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

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  
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  
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  
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  
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  
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  
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  
윤상현·윤영석·윤재욱·윤종필·윤한홍·  
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  
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  
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  
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  
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  
정우택·정종섭·정진석·정태욱·조경태·  
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경환(한)·최교일·  
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  
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정유섭·강석진·강석호·강효상·  
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립·  
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  
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  
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  
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  
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  
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  
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  
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  
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  
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  
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  
윤상현·윤영석·윤재욱·윤종필·윤한홍·  
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  
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  
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  
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  
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  
정우택·정종섭·정진석·정태욱·조경태·  
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경환(한)·최교일·  
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  
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5. 고용진·금태섭·이후삼·주승용·최재성·김병기·박홍근·이수혁·김병욱·민홍철 의원 발의)

3월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8. 변재일·신창현·박정·김병욱·유승희·신상진·소병훈·이원욱·고용진·신경민·김동철·김성수·홍익표·김종민·이철희·윤후덕·이학영·주승용·채이배 의원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8. 변재일·이용호·신동근·이철희·유승희·윤호중·신창현·송영길·이원욱·도종환·고용진·금태섭·김성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신창현·서영교·정재호·윤준호·서삼석·설훈·박정·유동수·심재권·박찬대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조경태·문진국·김상훈·엄용수·김승희·이찬열·박완수·이상현·김경진·김세연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8. 변재일·신동근·이철희·유승희·신창현·송영길·이원욱·도종환·정성호·고용진·금태섭·김성수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8. 김도읍·추경호·이채익·김태흠·최연혜·조경태·김순례·박맹우·홍문중·윤상현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도읍·주광덕·추경호·이채익·김태흠·조경태·김순례·박맹우·홍문중·윤상현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도읍·김태흠·박인숙·조경태·

김순례·박맹우·홍문중·윤상현·이장우·이진복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어기구·신창현·이훈·박완주·서영교·박재호·박정·서삼석·맹성규·안호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어기구·신창현·이훈·박완주·서영교·박재호·박정·서삼석·맹성규·안호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한정애·신창현·민홍철·추미애·강길부·강병원·김영진·최재성·김상희·이철희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변재일·이원욱·백혜련·표창원·김병욱·윤후덕·소병훈·김영진·신경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변재일·이원욱·백혜련·표창원·김병욱·윤후덕·소병훈·김영진·신경민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8. 김병관·이종걸·김성환·홍의락·김관영·전현희·박정·이훈·송갑석·박용진·임종성·이재정·박재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8. 박용진·심상정·이학영·채이배·김해영·윤관석·조승래·김병관·송영길·손혜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변재일·이원욱·백혜련·표창원·김병욱·윤후덕·소병훈·김영진·신경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8. 김철민·위성곤·이개호·이용득·신동근·신창현·윤관석·윤영일·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한정애 · 신창현 · 민홍철 · 추미애 · 강길부 · 강병원 · 김영진 · 최재성 · 김상희 · 이철희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선동 · 이종배 · 추경호 · 정병국 · 김재경 · 이학재 · 박성중 · 민경욱 · 문진국 · 김도읍 · 윤한홍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상훈 · 정태욱 · 김기선 · 심재철 · 박덕흠 · 김승희 · 박순자 · 윤영석 · 추경호 · 이종배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윤준호 · 전재수 · 최인호 · 오영훈 · 황주홍 · 이재정 · 김중희 · 고용진 · 김병욱 · 김민기 · 신창현 · 윤호중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기 · 변재일 · 이원욱 · 백혜련 · 표창원 · 김병욱 · 윤후덕 · 소병훈 · 김영진 · 신경민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중희 · 경대수 · 김수민 · 이학재 · 유성엽 · 강훈식 · 정인화 · 장병완 · 황주홍 · 정동영 · 최도자 · 윤준호 · 이찬열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문진국 · 이철규 · 김정재 · 김석기 · 송희경 · 임이자 · 장석춘 · 김선동 · 김현아 · 이용득 · 김용태 · 박순자 · 정운천 · 김재경 · 김규환 · 신보라 · 유기준 · 이채익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유민봉 · 김순례 · 윤상직 · 정유섭 · 광대훈 · 이은권 · 정종섭 · 강길부 · 이채익 · 이은재 · 이종배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관영 · 박주선 · 주승용 · 김삼화 · 박선숙 · 유의동 · 최도자 · 전해숙 · 임재훈 · 김수민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이훈 · 박정 · 김병관 · 손혜원 · 송갑석 · 이원욱 · 고용진 · 박재호 · 정세균 · 송기현 의원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이훈 · 박정 · 김병관 · 손혜원 · 송갑석 · 이원욱 · 고용진 · 박재호 · 정세균 · 송기현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윤준호 · 전재수 · 최인호 · 오영훈 · 황주홍 · 이재정 · 김중희 · 고용진 · 김병욱 · 김민기 · 신창현 · 윤호중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서영교 · 신동근 · 소병훈 · 이용득 · 김상희 · 박완주 · 신창현 · 김병기 · 유동수 · 민홍철 · 어기구 · 김철민 · 박정 · 김현권 · 심기준 · 맹성규 · 한정애 의원 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중희 · 경대수 · 김수민 · 이학재 · 유성엽 · 강훈식 · 정인화 · 장병완 · 황주홍 · 정동영 · 최도자 · 윤준호 · 이찬열 의원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황주홍 · 김광수 · 이찬열 · 정인화 · 유성엽 · 오영훈 · 박주현 · 윤준호 · 김성찬 · 조배숙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욱 · 유동수 · 도종환 · 고용진 · 윤준호 · 정재호 · 이종걸 · 이용득 · 최운열 · 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3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 3. 19.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의안 철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0. 김철민 · 김현권 · 윤관석 · 전재수 ·

위성곤 · 이개호 · 이수혁 · 윤영일 · 이찬열 ·  
이석현 · 설훈 의원 발의)

2019년 3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2019. 1. 15. 홍문표 · 김성태 · 정유섭 · 성일중 ·  
김영우 · 최교일 · 이명수 · 안상수 · 김기선 ·  
이종명 · 김상훈 · 김재경 의원 발의)

3월 15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이정미 · 김종대 ·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김경진 · 남인순 · 송옥주 · 이용득 ·  
김종훈 의원 발의)

3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간호조무사 종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에 관한 청원**

(2019. 3. 14.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외 74,627인으로부터 설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서면답변서 제출

**WTO 다자간 협상 및 CPTPP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9. 3. 15.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